
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

2026. 5. 29.

관 계 부 처 합 동

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(요약)

1 추진배경

- (국정기조) 국정목표(기본이 튼튼한 사회)와 전략(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)에 따라 '생명존중, 안전확보'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 이행 중
 - * (국정과제 76) '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 50% 저감('24년 164명 → '25년 137명 → '30년 82명)
- 안전한 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, 경제활동 참여자 모두가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의 내재화가 필수적
- (해양안전문화) 바다의 격리성, 감시 수단 부재로 인해 해양 활동 중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안전의식과 실천 활동이 부족
 - 해양활동에 대한 안전의식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규제(안전 문화 확산)와 규제(이행력 확보) 수단을 결합한 정책 강구 필요

2 추진방향

- (비전)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
 - 국민의 해양안전문화 의식 향상 및 안전한 해양 활동 보장을 위해 3대 전략, 6개 과제를 통한 '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' 추진
 - 해양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한 지원·교육 체계 강화, 안전 제도 및 체험 기회 확대, 범부처 홍보 및 협업 활동 강화



맞춤형 지원·교육

사업자, 종사자 지원 확대
참여형 마일리지제 도입

- ※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지원
- ※ 우수사업자 포상 확대
- ※ 해양안전 마일리지 도입
- ※ 대국민 맞춤형 교육



제도 및 인프라 마련

사업자 책임성, 감시 강화
일상 속 체험 기회 확대

- ※ 안전투자공시 제도 도입
- ※ 피로·위험 신고제 실시
- ※ 안전체험관 콘텐츠 연계
- ※ 안전학습 키오스크 보급



홍보 실천 활동 강화

캠페인 홍보 강화
디지털 네트워크 구축

- ※ 해양안전 캠페인 강화
- ※ 홍보 콘텐츠 다각화
- ※ 교육포털 시도입·고도화
- ※ 기관 간 협업 확대

3 핵심목표



4 주요과제

전략1. 사업현장과 국민을 위한 **맞춤형 지원·교육을 강화**하겠습니다.



□ (사업자·종사자) 해양수산 산업현장 지원확대 및 종사자 안전활동 지원

- ① 어업인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('26.7)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명조끼 소모 부품에 대한 자가 정비 교육 및 교체 지원 시범사업 추진('26)
- ② 안전관리 우수 선사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확대 및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진단 모델 개발을 통해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한 컨설팅 제공('27)
- ③ 외국 어선원의 한국어 교육 강화(70→78시간^{입국전}, 어플·회화 중심^{입국후}), 5톤 미만 소형어선 사고 저감을 위한 제도 개선(무자격→자격요건 신설, ~'30)

□ (대국민)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 도입 및 대국민 맞춤형 교육 지원

- ① 자발적인 해양안전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해양안전 교육, 캠페인 등 참여 시 해양안전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혜택 제공 추진('27)
- ② 생애 주기별 5대 안전교육 및 평생학습 플랫폼(K-MOOC)에 '해양안전' 영역 신설을 추진하고, 해양특성화 대학과 공동 체험교육 개설('27)
- ③ 점자책, 큰 글씨 등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내항 선사 대상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및 남시어선 이용객에 교육 추진('26)

전략2.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제도 및 인프라를 체계화하겠습니다.



□ (사업자·종사자)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감시·감독 체계 마련

- ① 사업자의 안전 경영 유도를 위한 안전투자공시 제도* 시행('26.6) 및 선사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선사 안전 등급제 도입('27)
 - * 여객선·위험물운반선 운항선사의 선박교체·관리, 인적자원관리, 안전품질관리 비용 등 공시
- ② 경영주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종사자 피로·위험 신고제 시행 및 공익 신고자를 보호·보상을 위한 가칭 블루 휘슬 제도 도입('27)
- ③ 운항 과실 근절을 위해 항해 당직 중 스마트기기 사용금지('26), 제한 속도위반 등에 대한 해상교통 질서위반 범칙금 도입('28)

□ (대국민) 일상 속 해양안전체험 기회 확대

- ① 접근성이 높은 문화·체험시설과 연계하여 해양안전 릴레이 전시('26) 및 등대 스탬프투어 등을 활용하여 해양안전체험 프로그램 추진('27)

- ② 소외지역(도서, 어촌) 대상 해양사고 VR장비, 구명조끼 등을 활용하여 해양안전체험 교육 제공 및 해양안전체험 시설 운영 중장기계획 수립('27)
- ③ 부처 체험관에 해양안전 학습용 키오스크 보급 및 체험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육·해상 안전 콘텐츠를 발굴하여 해양안전 콘텐츠 대중화('26)

전략3. 해양안전의식의 내재화를 위해 홍보·실천 활동을 다각화하겠습니다.

<p>〈해양안전 캠페인·홍보〉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 </div> <p>해양안전 캠페인 강화 홍보 콘텐츠 다각화</p>	<p>〈 안전문화 기관 간 협업 확대 〉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/div> <p>안전문화 기관 간 협업 확대</p>
--	---

□ **(홍보강화)** 해양안전 캠페인 강화 및 홍보 콘텐츠 다각화

- ① 안전한국훈련 연계 및 각부처의 ‘안전지킴이’와 교류 캠페인 추진,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테트라포드 위험경고판 설치 등 부처 협업('27)
- ② 레저·문화·안전 분야와 연계한 합동 캠페인 및 지역축제, 각종 해양 수산 기념일 등 행사와 함께 지역형 캠페인 추진('26)
- ③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 수상자를 크리에이터로 육성하고 바다내비를 통한 해양교통안전 라디오를 송출하여 안전 콘텐츠 연중 생성·홍보('26)

□ **(역량제고)**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 간 협업 확대

- ① 해양안전교육포털과 범부처 안전·교육포털을 연동하여 해양안전정보 접근성 향상 및 AI 챗봇을 도입하여 e-러닝 추천, 안전지식 등 제공('26)
- ② **해수부** 해양안전실천본부-**노동부**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및 지역 활동조직 간 전방위적 협업을 통해 육·해상 안전문화 확산('26)
- ③ 해양사고 인명피해자의 구명조끼 착용률 등 분석을 통해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목표 및 지표로 활용('27)

순서

I. 추진 배경	1
II. 현황	2
III. 추진 방향	5
IV. 세부 추진방안	6
1. 맞춤형 지원·교육	6
2. 제도 및 인프라 마련	8
3. 홍보·실천 활동 강화	10
V. 향후 추진계획	12

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

비전 |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

2030 해양안전 핵심 목표



*'24년 기준
50% 저감

40%

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률

('25년) 137명



('30년) 82명



50만 명

해양안전활동 체험자

('25년) 연 26만명



('30년) 연 50만명



80점

해양안전문화지수

('25년) 76점



('30년) 80점

3대 추진 전략



맞춤형 지원·교육

사업자, 종사자 지원 확대
참여형 마일리지제 도입

- »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지원
- » 우수사업자 포상 확대
- » 해양안전 마일리지 도입
- » 대국민 맞춤형 교육



제도 및 인프라 마련

사업자 책임성, 감시 강화
일상 속 체험 기회 확대

- » 안전투자공시 제도 도입
- » 피로·위험 신고제 실시
- » 안전체험관 콘텐츠 연계
- » 안전학습 키오스크 보급



홍보 실천 활동 강화

캠페인 홍보 강화
디지털 네트워크 구축

- » 해양안전 캠페인 강화
- » 홍보 콘텐츠 다각화
- » 교육포털 시도입·고도화
- » 기관 간 협업 확대

I. 추진 배경

□ (국정기조)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 '생명'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'를 전략의 하나로 설정하고, 전방위적 사고 예방 정책 추진 중

○ 우리 부는 '30년까지 사망 등 해양사고 인명피해 50% 저감('24년 164명 → '30년 82명)을 목표로 국정과제*를 설정·추진 중

* (국정과제 76)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,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

□ (안전한 사회의 조건) 안전한 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, 경제 활동 참여자 모두가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의 내재화가 필수적

○ 안전문화는 산업현장에서 제도, 안전 매뉴얼의 한계를 보완하는 근본적 관리 수단으로 인식되며, 중요 정책 아젠다로 정착

* (미국) 교통산업 분야 안전문화 중심 정책강화(Safety Culture Promotion Program, '23), (일본) 해양 분야 교육홍보 중심 예방 정책 확대(Marine Accident Prevention Strategy, '22)

□ (해양활동과 안전문화) 바다의 격리성, 감시 수단 부재로 인해 해양 활동 중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

○ 정부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해양안전교육,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,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조화 발생

⇒ 안전의식이 안전 수칙 이행으로 연결되도록 규제(이행력 확보)와 비규제(안전문화 확산) 수단을 결합한 실효적 정책 강구 필요

< 안전문화 실태 비교 >



<항공기 안전벨트 의무화('60.6)>



<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('26.7)>



<차량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('18.9)>

II. 현 황

1

일반현황

- (정책대상) 최근 5년간('20~'24) 바다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'24년에는 약 4,300만명*의 대다수 국민이 바다를 이용 중

* 해양수산부 통계연보 등 기준('24) : 어가인구(8.4만명), 연근해 어선 제외 선원(1.9만명), 연안여객선 이용객(1,263만명), 해양레저·관광객(3,032만명)

- 여객선 이용객은 1,263만명, 해양레저·관광객도 3,032만명 수준이며, 현재 추세로 '30년에는 인구수 약 5,130만명을 상회 할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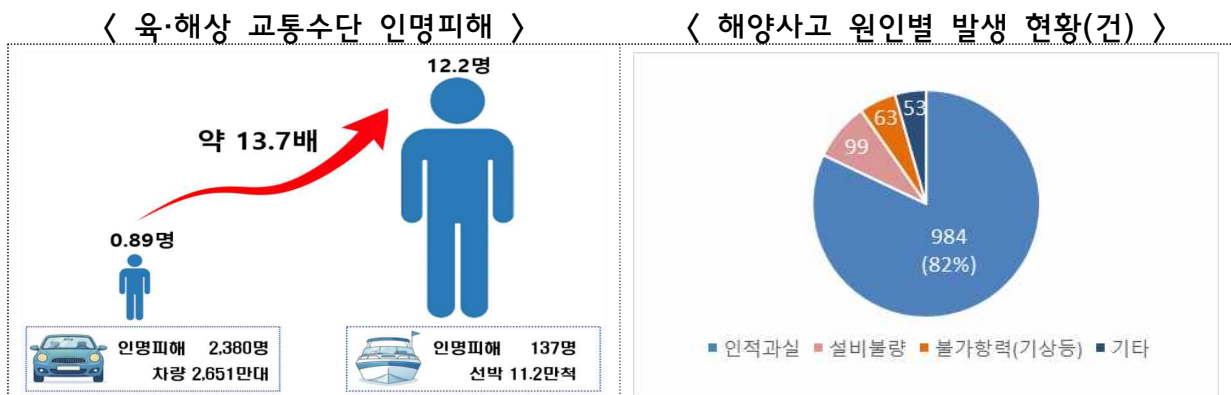


- (인명피해) '25년 기준, 자동차 1만대당 인명피해가 0.89명 수준이나, 선박 1만척당 인명피해는 12.2명 수준으로 약 13.7배 높은 상황

* (육상) 0.89명(2,380명/차량 2,651만대) / (해상) 12.2명(137명/선박 11.2만척)

- 특히, 최근 5년간('21~'25) 주요 해양사고(1,199건) 중 당직 근무 태만, 안전수칙 미준수 등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가 82%(984건*)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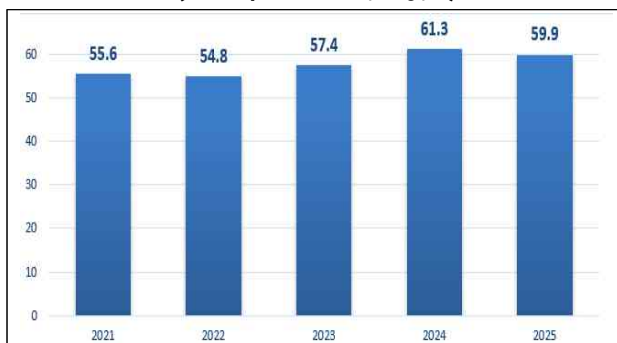
* 인적 과실 984, 설비 불량 99, 불가항력 63, 기타 53 순(출처: 중앙해양안전심판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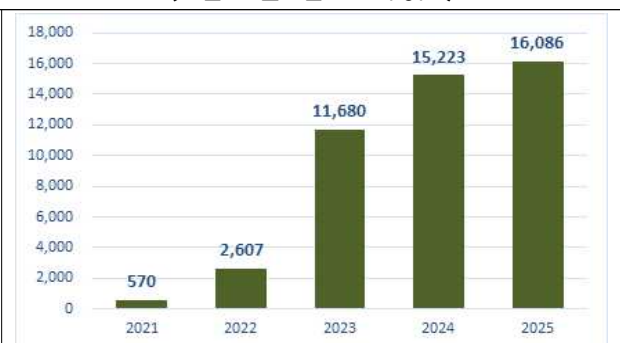
◆ 정책 대상별, 분야별 맞춤형 안전교육, 홍보, 캠페인 지속 확대 중

- (대국민) 해양안전체험관(2개소, 33.1만명), 해양안전 엑스포(6.3만명), 지역과 연계한 체험교육* 확대로 해양안전활동에 92만명 참여('21~'25)
 - * 해양안전 영상 교재, 어린이 VR 콘텐츠 제작, 체험형 키오스크 등 프로그램 구성
- 유치원, 초·중·고 및 대안학교에 찾아가는 해양안전 교육*(12.5만명), 물놀이시설 연계 체험교육(6.6만명) 등 전주기 맞춤형 교육 제공
 - * 각 지역 교육청을 통한 교육 신청·접수 후 해양안전 교육 전문 강사 방문·투입
- (종사자·사업장) 맞춤형 종사자 교육 28.9만명*,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우수사업장 지정, 해양안전 리더상 포상 등 안전문화 확산 노력('21~'25)
 - * 선박에 찾아가는 해양사고 예방교육(286,403명), 어업 종사자 등 현장교육(2,655명)
- 어촌계 협업을 통한 어업인 안전교육, 어업인 교육자료 개발 및 경영층 안전 세미나 등 안전 주체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
- (홍보·캠페인) 계절별 해양안전 대책과 병행하여 TV, 유튜브, SNS, 현수막 게시 등 콘텐츠·캠페인 다각화*(캠페인 참여자 4.6만명, '21~'25)
 - * (해양안전 콘텐츠) 공모전 개최 및 포스터 등 우수 콘텐츠 전시 활용, (KBS1) '불편해도 괜찮아', (유튜브) '아기상어 구명조끼송', '구명조끼 海주세요 릴레이 캠페인' 등

〈 교육 이수자(천명) 〉



〈 캠페인 참여자(명) 〉



- (현황진단) 해양 분야는 육상 분야에 비해 현장지원 및 교육, 제도 및 인프라, 민관 협업 캠페인 등 모든 분야에서 다소 미비한 실정
 - 해양 활동 중 안전을 경시하는 현장 문화 및 국민의 생애주기, 취약 계층에 맞춘 해양안전 교육 과정이 미흡
 - 위험 요소를 감시·신고하고 서로 격려하는 메커니즘이 부족하고, 일상 속 해양안전 체험 인프라 부족(육상 분야 시설 대비 0.4% 수준)
 - 사업자·선박 소유자의 영향력이 큰 해양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종사자 중심의 홍보·캠페인으로 정책 효과는 저조

〈 육·해상 안전문화 주요정책 비교 〉

구분	교육 (국민·종사자)	감시·신고 제도	인프라 (체험시설 등)	안전문화지표
육상	·연간 200만명	·안전신문고 등	·전국 550여개	·교통문화지수 81.3점
해양	·연간 6만명	·없음	·경기·전남 2개	·해양안전문화지수 76.1점

- (개선방향) ①수요자 맞춤형 지원 및 교육, ②안전 경영·실천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인프라 조성, ③홍보·캠페인 체계 개선
 - 현장 중심의 지원·보상 제도를 추진하고 대국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 정착
 - 제재·지원 정책의 효과적 운용을 통해 자발적 안전경영 문화를 조성하고 체험 인프라를 보강하여 일상 속 안전체험 기회 확대
 - 실효적 안전문화 활동과 민관 홍보·캠페인 협업을 통해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문화 안착 도모

- ① 맞춤형 지원·교육 ⇨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 기반 조성
- ② 제도·인프라 마련 ⇨ 자발적 이행, 일상 속 문화 확산
- ③ 실효적 홍보활동 ⇨ 안전의식 내재화 및 문화안착

☞ 일반국민, 업계(종사자·사업자) 등 정책 수요자별 맞춤형 계획 마련

Ⅲ. 추진 방향

비 전

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

목 표

① 해양사고 인명피해 : ('25) 137명 → ('30) 82명

※ 국정과제 76, '30년까지 인명피해 50% 저감('24년 164명 → '25년 137명 → '30년 82명)

② 해양안전활동 체험자 : ('25) 연 26만명 → ('30) 연 50만명

※ 해양안전체험관, 해양안전 교육, 해양안전 캠페인, 해양안전 마일리지 등 참여인원

③ 해양안전문화지수 : ('25) 76점 → ('30) 80점

※ 해양안전문화지수 '18년 68점 → '19년 72점 → '20~'24년 70점대 → '25년 76점 → '30년 80점

3대 전략

6개 추진과제

1. 맞춤형 지원·
교육

- ① 해양수산 산업현장 지원확대 및 종사자 안전활동 지원
- ② 참여형 마일리지제 도입 및 대국민 맞춤형 교육 강화

2. 제도 및 인프라
마련

- ①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감시·감독 체계 마련
- ② 일상 속 해양안전체험 확대

3. 홍보·실천 활동
강화

- ① 해양안전 캠페인 강화 및 홍보 콘텐츠 다각화
- ②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 간 협업 확대

IV. 세부 추진방안 (3대 전략 6개 추진과제)

전략 1

맞춤형 지원·교육

① 해양수산 산업현장 지원확대 및 종사자 안전활동 지원

사업자·종사자

< 사업자 지원 확대 >



구명조끼 정비지원



우수선사 포상 확대
안전 진단 컨설팅

< 종사자 안전 활동 지원 >



어선원 교육 및
외국선원 양성



모델형 표준교재
(e-라이브러리) 구축

□ (사업자 지원)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('26.7) 실효성 제고를 위한 어선 사업자 지원 및 선사의 안전경영 컨설팅

- 쏘어선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완료('26.4, 11.3만벌)에 따라 소모 부품 자가 정비교육 및 교체지원 시범사업*('26)

* 어선 사업자·선박 대상 구명조끼 부품에 대한 교체 수요조사 후 지원('26)

- 안전관리 우수 해운사 대상 인센티브 확대, 안전문화 진단 컨설팅 및 경영층 대상 안전 세미나·리더십 교육('27)

* 포상확대(2→3천만원), 응모서류 등 간소화, '해양안전 명예의 전당' 온라인 페이지 신설

**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진단 모델 개발('26), 해양사고와 경영 상관관계 연구 및 홍보('27)

□ (종사자 지원) 정책 사각지대에서 종사하는 선원의 안전한 선상 활동을 위한 틈새 교육 및 사고예방 서비스 지원

- 외국인 어선원의 한국어 역량강화 지원*('26~), 찾아가는 어선원 교육 강화 및 5톤 미만 소형어선 운항 자격요건 신설**(~'30)

* (E-9)20톤미만) 외국인 선원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체계 마련 연구, (E-10)20톤이상) 입국전 한국어 교육 확대(70→78h), 입국후 한국어 교육 전환(책→어플·회화)

** (현행) 자격없이 운항 가능→(개선) 운항능력진단 적성검사 시범운영 등 운항자격요건 신설

- 위험상황(충돌 등)시 외국 선원을 위한 바다내비 영어 경보 제공('26) 및 종사자 근무환경 맞춤형 표준교재(e-라이브러리)* 개발(~'30)

* 선박종류, 사고상황, 법령 등 18개 대분류로 구분된 교재를 트리형 시스템에서 열람



- (마일리지 제도) 해양안전활동 참여 시 적립·사용이 가능한 ‘해양안전 마일리지’ 도입으로 일상 속 안전실천 유도(‘27~)
 - 안전교육 이수, 캠페인 참여 시 해수부 해양안전 관련 앱·포털 (해로드·안전海) 등을 통해 포인트 적립 및 혜택*으로 환원
 - * (단기) 수산물, 크루즈체험권, 도서 등 구매, (중장기) 해양수산분야 취업진학 혜택 등 추진 검토
 - **해경청** 레저·낚시교육, 안전위험 신고 등 마일리지 취득 분야의 단계적 확대 및 마일리지 사용처를 민간 포털로 다변화(‘27~)

- (대국민 교육) 타 부처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과 해양안전교육을 연계하고 장애인·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확대
 - **행안부** 생애 주기별 5대 안전교육(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, ‘28~’32) 및 **교육부** 에듀넷 및 평생학습 플랫폼*에 ‘해양안전’ 분야 반영 추진(‘27)
 - *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, 온국민평생배움터에 해양안전 콘텐츠 신규 탑재
 - **복지부** 시니어 강사 양성 및 **노동부** 안전보건 전문강사 공동 활용(‘26~), **교육부** 해양특성화 대학 연계형 해양안전 체험교실 개설(앵커 사업, ‘26~)
 - 점자책, 음성, 큰 글씨 등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및 낚시교육 등 신규 프로그램 운영(‘26~)
 - 내항 여객선사 대상 교통약자 서비스* 교육(‘26), 낚시어선 사업자 대상 교육을 낚시어선 이용객으로 확대(‘26)
 - * 「교통약자법」에 따른 ‘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’을 위한 국토부(‘25) 개발 교재 활용

1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감시·감독 체계 마련

사업자·종사자

< 사업자 책임 강화 >



안전투자공시



선주 책임강화

< 감시·감독 체계 강화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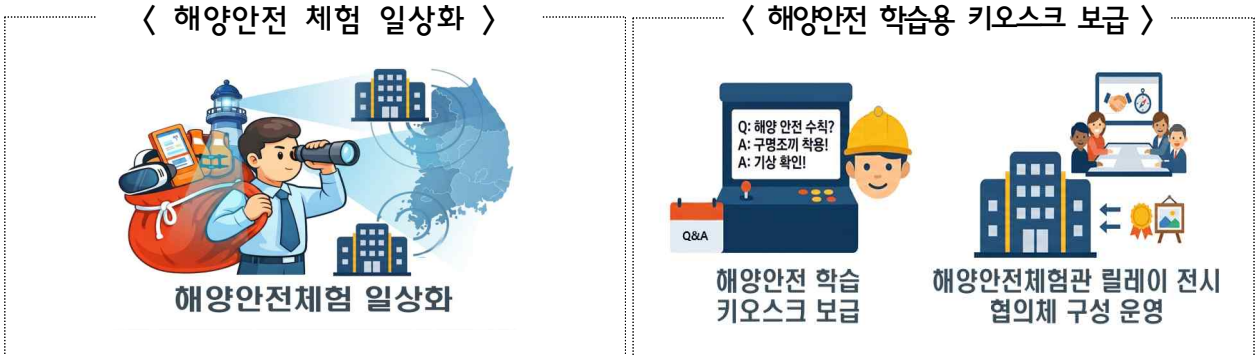


피로위험 신고



항해중 스마트기기 사용금지

- (사업자 책임성 강화) 안전경영 문화조성을 위한 신규 제도발굴·시행
 - 선박·선원에 대한 비용 투자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전투자공시 제도 시행(96개사*, '26.6)으로 해운사업자의 안전경영 유도
 - * 여객선사 및 원유·화학제품선 등 고위험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선사 대상
 - 선사별 맞춤형 관리를 위한 선사 안전 등급제('27)* 및 안전수준 부실 선박 위주의 타깃형 관리체계(가칭 K-Qualship) 도입('28)
 - * (선사)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, (선박) 사고이력, 선령, 위반행위 등 고려 집중관리
 - 중대형 화물선 선박소유자-선박 관리사 간 책임과 권한 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*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근절('26)
 - * 선박 안전관리를 위탁한 선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수탁업체 감독 의무 제도화
- (감시·감독)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상시 감시망 구축을 통해 안전 저해 행위를 근절하고 자발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 정착
 - 경영주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종사자 피로·위험 신고제 및 안전 공익 신고자 보상을 위한 (가칭)블루 휘슬 제도* 신규 도입('27)
 - * 신고자를 보호·지원할 수 있는 비공개 제보 시스템, 보상 체계 마련 → 참여율 제고
 - 운항 과실 근절을 위해 항해 당직 중 스마트기기 사용금지('26), 제한 속도위반 등에 대한 해상교통 질서위반 범칙금 도입('28)
 - 행안부 안전신문고의 '해양쓰레기' 신고 기능을 '해양안전'으로 확대 하여 접수된 신고가 해수부로 배정되도록 신속 처리



□ (일상 속 체험) 다중 이용시설에 해양안전을 주제로 놀거리·볼거리를 제공하여 국민 일상 속으로 안전문화 정착·확산

- 접근성이 높은 문화시설 및 체험관에 해양안전 릴레이 특별 전시* (‘26.5~) 및 등대 스탬프 투어 등 협업·융합 콘텐츠** 제공

* (해양박물관) 인천(‘26.5) → 부산(‘26.6) → (해양안전체험관) 진도(‘26.7) → 안산(‘26.8) 등

** (해양안전체험관) 해양안전가족캠프 운영(‘26) 및 등대 스탬프 투어 장소 추가(‘27)

-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시설* 교육운영 추진 및 ‘해양안전 체험시설 중장기 계획’ 수립·추진(‘27)

* (기존) 워터파크, 야외 수영장에 구명장비, VR장비 운영 → (강화) 어촌 마을, 도서 지역 여객 터미널 대합실에 수영폴 등 간이 해양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

□ (부처 협업·연대) 타부처 안전체험관과 연계하여 해양안전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해양안전 콘텐츠의 대중화 추진

- 행안부, 교육부, 소방청 국민안전체험관 등에 해양안전 학습용 키오스크 보급* 및 각 부처 체험관에 해양안전 주제전시 개최 등

* 타부처 공공 문화·안전시설에 키오스크 보급(‘26, 40대) 및 유지보수(‘27~)

- 행안부 국민안전체험관, 교육부 학생안전체험관, 소방청 119안전체험관과 체험 콘텐츠 공유* 등 공동기획 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체 운영(‘26~)

* 해양사고 예방 VR 장비, 구명조끼, 구명뗏목 및 해양안전교육을 육상 프로그램과 연계

1 해양안전 캠페인 강화 및 홍보 콘텐츠 다각화

대국민

< 캠페인 강화 >



해양안전 캠페인 강화

< 홍보콘텐츠 다각화 >



해양안전 홍보 콘텐츠 다각화

- (캠페인 강화) 각 부처 정책 캠페인과 협업하고, 지역 행사, 각종 기념일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해양안전 캠페인 추진
 - 안전한국훈련 연계 캠페인('27), 안전지킴이* 간 교류 캠페인('27), **해경** 테트라포드 위험 경고판 설치 등 협업('27)
 - * (해수부) 바다환경지킴이, (해경) 해양재난구조대·연안안전지킴이 등
 - **지방정부** 지역축제 및 레저·문화·안전 분야 합동 캠페인* 및 각종 해양수산 기념일** 행사와 함께 지역형 캠페인 추진
 - * 프로야구 시즌 지하철역 도로·해양안전 캠페인('26.4, 교통공사), 해수욕장 시즌 안전 캠페인('26.7, 전국지역),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안전 캠페인('26.8, 경남·거제) 등
 - ** 해양안전의 날·어선안전의 날(매월 1일), 선원의 날(6.19), 세계 등대의 날(7.1) 등
- (홍보 다각화) 정책 자료 위주의 홍보 수단을 시청각 콘텐츠로 다양화 하고 상시 노출수단을 확보하여 대국민 접근성 향상
 -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개최 시 AI 분야 확대* 및 수상자를 전문 크리에이터로 육성('26~) 및 홍보물 연중 생성·송출
 - * ('25) AI숏폼그림 등 4개 부문 → ('26~) AI 생성형 이모티콘, 해양교통 라디오 부문 추가
 - 바다내비를 통한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방송('26~)*, 준해양사고 사례 삽화·웹툰 제작·배포 등 홍보 콘텐츠 다각화
 - * (대상/내용) 연간 7천여척 연안선박, 선박 안전수칙, 바다상식 등 송출(매일, 각 20분)



□ (디지털 네트워크 구축) AI 기반 해양안전교육포털 고도화, 범부처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양안전정보 접근성 향상

- 해양안전교육포털과 행안부, 교육부, 노동부 안전교육 포털* 간 학습자료를 연계하고, AI 챗봇을 도입하여 e-러닝 추천, 안전지식 등 제공(26~)

* 교육부(학교안전지원시스템)·행안부(국민안전교육플랫폼)·노동부(산업안전포털) 등

- 행안부 안전신문고 시스템과 해수부 포털(해로드, 낚시海)을 연동하여 불법 행위 감시 및 신고 기능을 해양수산 현장으로 확대(27~)

□ (기관 간 협업 확대 등) 안전활동 실천 조직*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안전 문화 지표를 마련하여 체계적 정책 추진

* (해양안전실천본부, '13~) 해양안전문화 교육·캠페인 등 민·관 협력체(중앙1·지역11)

** (안전문화실천추진단, '23~) 안전보건문화 교육·캠페인 등 민·관 협력체(중앙1·지역39)

- 해수부 해양안전실천본부-노동부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및 지역 활동조직 간 전방위적 협업을 통해 육·해상 안전문화 확산(26~)

* (온라인)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누리집 내 해양안전 콘텐츠 게시 및 전국 홍보 확대, (오프라인) 해수부-노동부 간 홍보물 공동 제작 및 합동 캠페인 등 실시

- 해양사고 인명피해자의 구명조끼 착용률 등 분석을 통해 해양 안전문화 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 목표 및 지표로 활용(27~)

* 해양사고 보고서, 선박 검사 결과, 현장 점검 결과 등 조사·분석

V. 향후 추진계획

주요 추진 과제 및 일정		기관	추진일정
① 맞춤형 지원·교육			
1. 해양수산 산업현장 지원확대 및 종사자 안전 활동 지원	• 어업사업자 구명조끼 자가 교체 보조	해수부	'26~
	• 해운선사 포상 등 지원 확대	해수부	'26~
	• 해양안전문화 진단 모델 개발 및 컨설팅	해수부	'26~
	• 찾아가는 어선원 교육 추진	해수부	'27~
	• 외국인 어선원 인력 양성·관리 추진	해수부	'26~
	• 바다내비 위험경보 영어 서비스	해수부	'26~
	• 모듈형 종사자 e-라이브러리 서비스	해수부	~'30
2. 참여형 마일리지제도 도입 및 대국민 맞춤형 교육 강화	•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 도입	해수부, 해경청	'27~
	• 생애주기 5대 안전교육 등 '해양안전' 영역 신설 추진	해수부, 행안부 등	'27~
	• 해양 특성화 대학 연계형 해양안전 프로그램 개발	해수부, 지방정부	'26~
	• 시니어 강사 양성 및 안전보건 강사 공동활용	해수부, 노동부, 복지부	'26~
	• 여객선사 대상 교통약자 맞춤형 교육	해수부	'26~
• 낚시교육 확대	해수부	'26~	
② 제도 및 인프라 마련			
1.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감시·감독 체계 마련	• 안전투자공시 제도 시행	해수부	'26~
	• 선사 안전 등급제 추진	해수부	'27~
	• 타깃형 관리체계(K-Qualship) 시행	해수부	'28~
	• 선박 운항중 스마트기기 사용금지	해수부	'26~
	• 해상교통 질서위반 범칙금	해수부	'28~
	• 블루휘슬 등 감시감독 제도 도입	해수부	'27~
	• 안전신문고 '해양안전'분야 신고 기능 확대	해수부, 행안부	'27~
2. 일상 속 해양안전체험 기회 확대	• 권역별 특별 기획전 릴레이 전시	해수부	'26~
	• 등대 스탬프 투어 등 등대여권 확대	해수부	'27~
	• 간이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 추진	해수부	'27~
	• 해양안전체험관 중장기 계획 수립	해수부	'27~
	• 해양안전 프로그램 전국 확산(키오스크 보급)	해수부, 행안부, 교육부, 소방청 등	'26~
	• 해양안전체험관, 안전체험관 콘텐츠 대중화	해수부, 행안부, 교육부, 소방청 등	'27~
• 범부처 안전체험관 협의체 운영	해수부, 행안부, 교육부, 소방청 등	'26~	
③ 홍보·실천 활동 강화			
1. 해양안전 캠페인 강화 및 홍보 콘텐츠 다각화	• 찾아가는 캠페인, 해양안전 콘텐츠 지역 확산	해수부, 해경청, 지방정부 등	'27~
	• 지역 행사, 기념일 등 합동 캠페인 추진	해수부, 지방정부 등	'26~
	•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확대	해수부	'26~
	• 해양안전 크리에이터 육성	해수부	'26~
	• 바다내비 해양안전정보 라디오 방송 홍보	해수부	'26~
	• 준해양사고 사례 삽화·웹툰 제작	해수부	'27~
2.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 간 협업 확대	• 안전교육포털 학습자료 공유·연계	해수부, 행안부, 교육부, 노동부 등	'26~
	• 해양안전교육포털 AI 챗봇 서비스 도입	해수부	'26~
	• 안전신문고-해양수산 포털 신고 기능 연계	해수부, 행안부	'27~
	• 해양안전실천본부-안전문화실천추진단 협업	해수부, 노동부	'26~
	• 해양안전문화 정책 지표 마련	해수부	'27~